

미래대전환 대통령선거

아침을 열며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인간이 시간여행을 한다면 과거로 돌아가거나 미래로 이동할 수 있을까? 한국과 미국 뉴욕의 표준시를 적용한다면 14시간 정도 차이가 난다. 만일 1초만에 뉴욕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지구에서 14시간 전의 세계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일 지구의 시간 속도 표준보다 더 빠른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면 인터스텔라의 밀러행성처럼 더 이전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로의 이동도 훨씬 빠르게 나아갈 수 있다.

아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타임머신과 SF에서는 가능하며, 우주에서의 시간은 알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상대적이다.

그래서 지나온 3년이 넘는 잃어버린 시간은 회복 가능한 것인가, 윤석열 정권으로 인해 파손되고 후퇴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가.

오죽하면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하며 탄핵 파면의 힘겨운 시간을 뒤적이며 기다려왔다. 그리고 느리고 느리게 현재의 판결이 이뤄졌고 마침내 윤석열의 1060일의 시간은 끝났다. 판결은 명명백백하게 정의를 구현했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보상에 주진 않는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잃은 것은 무엇이고 후퇴한 시간을 어떻게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

상받을 수 있을까?

보상은 커녕 정부는 지난해 나랏빛이 1175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래에 갚아야 할 국가 총 부채도 2585조8000억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감당할 빚이 2270만9000원이다.

조기 대선 후 다음 정부가 이 짐을 받아야 한다니 저절로 탄식이 나온다. 이런 재정관리를 하고도 탄핵된 윤석열과 버젓이 현재 정부를 관리하는 한덕수, 최상목 등의 현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자가 없다. 염치 없는 정부다. 줄탄핵을 비난할 일이 아니라 총사퇴를 해야 할 정부 아닌가.

윤 정부 1천일 동안 서민경제 악화, 과학산업 후퇴, 부동산정책 실패, 노동정책 갈등을 거듭했다. 검찰 권력 독점과 언론시민사회 탄압으로 민생정치는 무능하고 틈만 나면 외치던 자유민주도 대폭 후퇴했다.

대일 굴욕외교와 남북긴장격화, 균형 없는 대중대러 편향외교로 실리와 평화 균형외교는 실종됐다. 교육정책은 혼란을 거듭했고 복지는 축소시켰으며 의료 대란마저 일으켰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었고 생활고는 커졌다. 보수청년들이 지금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데 그가 청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알고나 있는지 한심하다.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위기를 민주당 탕 중국 탕으로 선포하는데 골몰했을 뿐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할 일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윤 정권 내내 김건희의 비리와 섭정이 도를 넘었고 사건사고가 잇따랐으나 책임지는 내각은 없고 인사청탁과 부정비리만 진동했다.

이게 나라냐. 보수 정객들마저 윤석열의 무능과 부패를 비판했고 주술과 술로 분탕질한 방탕한 대통령실을 비난했다.

무모한 계엄으로 하루 라도 빨리 정권이 끝난 것이 다행이라고 국민들이 말할 지경이었다.

윤석열이 망친 나라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가 다르게 치열하게 변하는 인공지능 첨단기술에서 점점 뒤쳐져 버린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책임이 없지만 이 현실을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시 국민 몫이 되었다. 조기대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과 그 잔재들을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탄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심판과 단죄로 새 나라를 만들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완전히 대전환을 해야한다. 대한민국 미래전환을 위한 미래전환 민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윤석열의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고 뒤쳐져 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통합적 전환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챗지피티로 중국이 딥시크로 나갈 때 한국의 AI는 없었다. 첨단기술에서 선진주자였던 한국이었으나 지금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시간에 전환을 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다. 더구나 뒤쳐진 시간회복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내야 한다.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전환운동을 제안하고 호소한다. 푸르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예술’의 구원을 통해 시간을 되찾았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환’의 구원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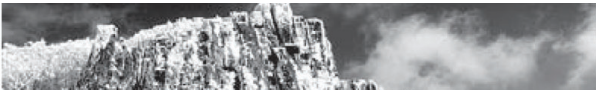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세상

미국지질조사국(USGS)이 제공한 영상 사진에 8일(현지 시간) 하와이주 화산 국립공원 내 킬라우에아 화산이 분출해 용암이 치솟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다. 주요 외신들이 긴급 보도를 내보낸 것도 그 의미가 단순한 국내 정치를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AP, 로이터,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결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그 배경과 의미, 국민 반응을 상세히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공통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며, 한국 현재가 이를 저지한 것을 ‘민주주의의 방어’로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민주주의 안전장치의 시험대를 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표결에 이어 사법부도 윤 대통령이 행한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계엄 시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흥미로운 점은 대다수 외신이 한국 민주주의의 우수한 회복 탄력성에 주목한 반면, 일본 언론만 부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사실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일한 관계를 극적으로

일본만 반기지 않는 탄핵

다름없어 국민적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한국 정부는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명확히 기록하라는 요구 없이 등재에 합의해줘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를 사실상 묵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두고 유독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자국의 외교 손실’을 걱정하고 있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윤 정부의 외교가 얼마나 일본 측에 기울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일본만이 반기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 외교당국은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박성원 편집국장

역사·문화 되살려야 할 해남 목포구 등대

명소화 사업 중앙투자審 통과

100년 가까이 해남 화원반도를 오가던 뱃길을 비추던 목포구(木浦口) 등대 명소화 사업이 9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목포구 등대가 일제강점기 한반도 수탈의 산 증인이면서 근·현대사의 애환을 품어 안는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목포구 등대 관광명소화 사업이 해남과 목포 등 서남해안 관광의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

해남 목포구 등대가 불을 처음 밝힌 것은 대한제국 말기 인 1908년 1월 1일이다.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까지 승리한 일본이 본격적인 대륙 진출을 위해 해남 화원반도와 목포시 달리도 사이 600여 m 낯짓 되는 좁은 수로를 비추기 위해 세운 것으로 지난 2003년 새로운 등대가 건립될 때까지 95년간 육지의 관문인 목포구의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08년에는 근대문화유산인 등록문화재인 문화재자료 제379호로 지정됐다. 목포구 등대가 자리잡은 화원 월래 해안도 구 등대와 함께 새로운 등대를 배경으로

서해 바다의 환상적인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해남이 명소로 손꼽힌다.

이번 사업은 해남군의 주요 관광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서 해남군의 관광명소화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해남군은 목포구 등대 일원에 예술의 등대 전시관, 해풍갤러리, 정원 등을 포함한 복합 문화 관광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해남군만의 독특한 해양 관광 경험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해남군의 대표적인 해양관광지 오시아노 관광단지와 우수영 관광지를 연계한 해양관광 인프라도 구축해 갈 방침이다.

해남군은 물론이고 전남도와 정부는 머리를 맞대 일본이 한국 경제를 침탈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바라본 상징인 목포구 등대를 대한민국의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근현대사의 애환을 담은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인문학적 가치도 높여야 한다. 해남 목포구 등대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려는 해남군의 도전을 환영한다.

특별 감찰기간 잇단 음주 경찰 엄벌해야

도 넘은 일선현장 기강해이

광주·전남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최근 잇따라 음주운전·음주사고로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어수선한 탄핵 정국에 이어 음주 운전을 근절하고자 진행 중인 내부 특별 복무관리 기간 중에도 비위가 반복되면서 일선현장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남경찰청 소속 A순경은 8일 오전 광주 광산구 제2순환도로 내 첨단 방면 산월나들목 주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는 광산경찰서 소속 B순경이 서구 매월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치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순경은 시보 기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달 15일에는 신안경찰서 소속 C경감이 나누시 다시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C경감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불응,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입건

됐다.

‘음주 운전은 살인 행위’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 이를 예방하고 단속을 해야 할 경찰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건 부끄러운 현실이다. 문제는 잇단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에 광주·전남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특별 감찰을 벌이고 있다. 앞선 120여 일 탄핵 정국 속에 인사마저 늦춰졌던 어수선한 상황에서 기강 해이는 그야말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탈행위다. 이미 수차례 음주 적발로 국감에서 조차 못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열린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남 경찰의 음주운전 비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남경찰청도 같은 해 11월 28일부터 음주 운전 징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한다.

되풀이되는 음주운전 적발로 경찰에 대한 신뢰는 이미 추락했다. 이래서야 무슨 명분으로 시민들의 음주운전을 단속하겠는가. 일부의 일탈이 경찰 전체의 신뢰마저 추락시키는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의 음주 비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결국 강력 처벌밖에 답이 없어 보인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